



한전공대 입지 선정 심사위원들이 24일 광주시가 추천한 부지 중 1곳인 첨단3지구 현장 실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한전공대 부지심사위원들이 24일 오후 전남이 추천한 부지 중 1곳인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CC를 현장실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전공대 부지 실사 마무리... 오늘 2곳 압축

광주시 부시장 동행 '적극'·전남도 주민들 통제 '민감'
 광주·전남 1곳 씩 2차 심사 ... 28일 균형발전위서 최종 발표

광주시와 전남도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전공대 부지 선정에 관한 현장실사가 24일 마무리됐다. 25일 최종 평가를 거쳐 오는 28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종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등을 1시간 간격으로 찾아 브리핑을 듣고 후보 부지를 직접 살펴봤다. 이어 오후에는 전남으로 자리를 옮겨 나주시에 위치한 부영CC, 농업기술원, 산림자원연구소 등 전남지역 3곳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실사했다.

한전공대 입지 선정 심사위원 20여명은 24일 광주·전남지역 후보지 6곳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였다. 심사위는 이날 오전 광주시가 추천한 북구 첨단산단 3지구를 시작으로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송촌보 일대

심사위원들은 후보지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인근 높은 건물 등에 올라 부지 전체를 조망하며 서류 내용 등과 비교하며 부지를 꼼꼼히 살폈다. 각 후보지에 배정된 시간은 총 30분씩으로 각 지자체의 현장 브리핑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필

요하면 제2조망점으로 이동해 현장을 추가로 살펴보기도 했다.

이날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 분위기는 광주와 전남이 대조를 이뤘다. 광주의 경우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3곳 후보지를 모두 동행했고, 직접 브리핑을 하며 광주가 한전공대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또한, 후보지 해당 자치단체장인 문인 북구청장과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현장에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환영단까지 나와서 한전공대 유치 열의를 보였다.

반면, 전남은 한전이 제시한 비공개 원칙에 따라 실사 현장에 최소 인원만이 참석했으며, 일부에선 기자들과 주민들까지 통제하고 나서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광주시는 전남과의 상생발전, 산학연계, 집적효과, 비용절감 등을, 전남도는 후보지 대부분이 국공유지인 만큼 빠른 개교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실사를 마친 심사위는 광주와 전남 후보지 각각 1곳으로 압축한 뒤 오는 25일까지 2곳 압축 후보지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선정 부지 발표는 28일 오전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오전 11시에 열리는 '한전공대 범정부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용역사의 한전공대 부지심사위원장이 각 지자체 1순위 후보지 총 2곳에 대한 심사결과를 비공개 보고하고, 회의가 끝나면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사법수장 헌정 사상 처음...김명수 대법원장 "국민께 송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관련기사 2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

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환(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저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또 국민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천정배 의원 질의에 답변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 의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답변을 전날 받았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따르면 보훈처는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이미 있었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정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회신했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 9일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국가보훈처는 이와 함께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

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정부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경제자유구역 조성 현실성 있나?

용역사 선정 작업 본격화
 계획된 부지 지정조치 힘들어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용역사 선정 작업이 본격화했지만 현재 계획된 부지에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용을 만들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맡을 업체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1차 공고에는 응찰자가 없었으나, 2차 공고에는 2개 업체가 응찰했고 25일 협상을 통해 이르면 다음주에 용역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부지가 정부와 전남도 소유이며, 광주군공항 부지는 군공항 이전 비

광주시는 다음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지침이 나오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발계획을 만들어 늦어도 6월까지 산자

부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 산자부 심의를 거쳐 올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부분 예정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전남도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고, 광주군공항 부지를 활용해 군공항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가 구상하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은 빛그린산단 184만7000㎡(56만평)와 남구 도시첨단산단 143만㎡(43만평), 광주공항 820만㎡(248만평) 등 1147만7000㎡(347만평)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해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빛그린산단의 전체 부지는 광주시 56만평, 합평군 67만평으로 각각 나뉘져 있고, 남구 도시첨단산단은 광주시 15만평, 지방산단 28만평으로 구분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전남과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2-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6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초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연일 20 (소촌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림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t), 복합회합유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시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시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